

2차 긴급대출, 6개 銀行서 18일부터... 금리 3~4%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오후 6시까지 운영
2차 긴급대출 25일부터 심사업무
약 20일간의 대출공백 기간 발생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문의 급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다만 1차 긴급대출 자금이 소진된 후 2차 긴급대출이 시행되기까지 20여일간 공백기간이 발생해 햇살론 등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긴급대출부터 정책자금까지 도미노 연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긴급대출 상품이 소진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차 긴급대출 자금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1~6등급 소상공인은 IBK기업은행, 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중·저신용자 이용가능한 1차 긴급대출 소진

1·2차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 프로그램

대출창구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지원한도·금액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으로 분리 시중은행(3000만원) 기업은행(3000만원) 소진공(1000만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6개 은행 일원화 건당 최대 1000만원
금리	1.5% 고정금리 (기업은행, 소진공 보증수수료 추가)	3~4%대 (은행 최종금리 책정)
지원기간 (초저금리 적용기간)	시중은행(1년), 기업은행(3년) 소진공(5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우선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난 29일 기준 소진공에 접수된 긴급대출 건수는 총 6만8722건으로 이 가운데 6만 2190건이 실행됐다. 접수된 금액은 7228억원이며, 실행된 금액은 6546억원이다.

1~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일부 영업점을 제외하고 지난 29일 소진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차 긴급대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일부 영업점을 제외하곤 대부분 영업점이 추가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과거했던 직원들도 6일 복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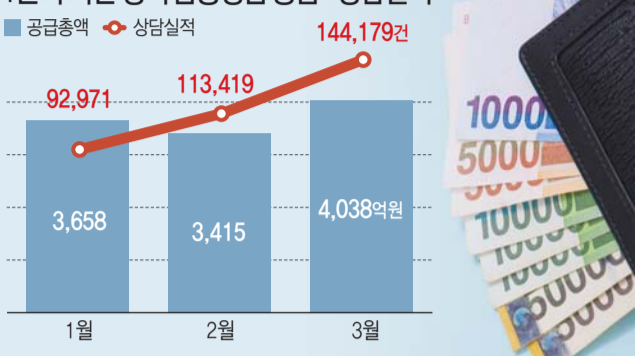
다만 시중은행의 2차 보전대출은 아

직 여유가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이 모두 접수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오는 8일 1차 긴급대출 접수를 마감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1~3등급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사실상 중·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1차 긴급대출은 종료됐다는 설명이다.

◆18일부터 2차 긴급대출 신청...금리 3~4%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5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으로 나뉘었던 1차 긴급대출과 달리 2차 긴급대출은 모든 신용등급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서민 정책금융상품 공급·상당실적



자료/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연 금리는 3~4%로 1차 긴급대출(1.5%)보다 1.5~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리는 확정금리가 아니라 은행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종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등급에 따라 1000만~3000만원으로 나뉘었던 대출한도도 건당 1000만원 한도로 통일한다. 대출만기는 2년 거치에 3년 원리금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1차→2차 긴급대출 공백...햇살론 등 정책금융 이용

그러나 2차 긴급대출의 경우 18일부터 사전접수를 받고 25일부터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은 약 20일 간 자금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긴급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은 2차 긴급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차 때처럼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전산망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감안하면 내달 초부터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 상품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긴급대출자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3월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총 4038억원이다. 이는 2월(3415억 원) 대비 18% 이상 증가했다.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 상담 건수 역시 14만4179건으로 전월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긴급대출을 제외한 다른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상품의 이자가 낮아 우선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대출에 이어 정책자금, 또 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카드론 등으로 연쇄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과기부, ICT R&D사업 예산 58% 조기 집행 (5878억)

3월부터 적극행정 일환으로 시행
통일된 기준 사전 제시...공정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올해 예산 총 1조91억원의 약 58.3%에 해당하는 5878억원을 4월 내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까지 76개 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완

화했고, 53개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번 ICT R&D 협약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업 R&D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동영상 발표와 콘퍼런스 토크를 활용한 비대면 원

격평가 방식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평가방식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평균 4.26점/5점 만점)이었으며, 동영상 제작 및 자료작성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양질의 R&D 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성·영상 등 품질 개선 및 보안성 강화, 실시간 영상회의의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KBSI, 6조 7000억대 생산유발 효과 분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면 '14만 고용창출...'서 계속

또 안전성 면에서도 화강암 기반으로 자연재해가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지진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50년간 3.0 이상의 지진이 단 3회로 총북, 경북 등 타 지자체보다 적다. 또 고속철도 역사에서 시설까지가 8분 거리로 후보지들 중 가장 가까워 연구원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춘천은 수도권과 40분대 거리에 있으며, 부지가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을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2.0 이상 지진이 한번도 없었던 지역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

추었다. 사업부지로 기본개발 유용 면적인 26만㎡의 2배에 달하는 52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9만2000㎡ 부지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창은 경북, 중부,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망과 잘 연결돼 있으며, 전국 2시간 이내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KTX) 분기역인 오송역도 오창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오창에는 260개 바이오기업, 90개 반도체 기업, 657개 화학기업이 위치해 방사광 가속기 활용 가능 기업이 많은 것. 또 화강암반이 넓게 분포해 자연재해의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확인서 있어야 입국가능

확인서 미 소지시 탑승권 발권 제한

정부가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자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격리시설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일시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현지에서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을 기록한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은 6일부터 10

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고,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엔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한용수 기자 hys@

기술에서 미래 이동수단 필수 요소로

>> 1면 '카셰어링 저물고...'서 계속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언택트에 대비할 수 있는 데다, 정확성을 높이는 등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드론 역시 미래 모빌리티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면서,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단순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제어 기능으로 사용

가능해 사고 걱정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두산이 만든 수소 드론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드론 활용도가 더 늘어날 미래 시대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면 드론 추진력과 가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계는 코로나19로 미래를 완전히 다시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